

재중 탈북자의 북한 사회주의체제 인식조사 *

-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지역 -

임 채 완(전남대학교)

◆ 논문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그들의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검토·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중국연변자치주의 연길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왕청현, 화룡현 등에 체류하고 있는 약 200명의 탈북자들을 직접 인터뷰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조사내용은 탈북자들이 1) 북한 체제유지 이유와 체제 존속기간의 인식, 2) 북한내 체제비판세력의 존재여부와 비판행위 가능성, 3) 사회불만 표출 가능성과 사회통제의 효율성 진단, 4) 당·국가 지시노선의 하부조직까지 관철여부, 5) 지도자의 평가, 6) 공식적·비공식적 경제생활 평가, 7) 남북한 체제 비교인식과 북한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이다.

재중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도자 인식, 사회적 만족도,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통제는 여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경제 생활에서 비공식부분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재중탈북자들의 그들 체제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달리 한 국사회와 그들 지도자에 대한 인식, 비공적인 경제활동 등에서 심각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체제가 현재 걸음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것 같지만 이러한 상황의 미해결과 계속된 주민들의 내핍생활의 강요는 결국 체제의 정통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로 정치사회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것이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1. 연구 목적

최근 남북관계의 '속도조절'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에 자주 회자되고 있는 말이 북한사회의 '변화론'이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책수준 내지 경제력 측면에서 북한을 보는 것 같으며, 북한사회 불변성의 주장은 대체로 체제수준 내지 정치·군사력 측면에 근거하고 있다.

정책 수준에서 말하는 변화의 개념은 체제유지적 변화 또는 체제내 변화로서,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가 수행하려는 정책 전반의 방향과 노선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합영법과 외국인 투자법 제정, 나진·선봉무역지대 설치, 농업생산 향상을 위한 분조제 채택,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금강산관광특구 설치, 남북경협외의 제도화 등은 정책변화의 사례 등이다. 체제 수준의 변화는 체제전환적 변화로서 국가와 사회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 수준의 정치적 변화는 종래의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운 헌법으로 대체하거나, 다당제의 자유선거제도의 도입, 그리고 시민사회 형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익단체의 허용 등이며, 이것의 경제적 변화는 계획·통제경제체제의 포기, 국가소유 내지 협동단체 소유의 기업과 토지의 사유화 추진 등이다.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부는 기존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또는 개방·개혁 이후 정치, 사상, 경제, 외교에서 총체적 위기 상황¹⁾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위기가 초래된 원인과 대

1) 위외다(Howard Jwiarda)가 쿠바의 카스토로 정권의 위기와 붕괴 가능성 문제를 제시한 변인은 이데올로기·제도·사회·리더쉽·경제·국민사기·대외적 위기 등 7가지로 나누고 있다.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pp. 387~398.

처 방법, 경제 체제의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외부 세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원인이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변절자들의 배신행위에서,²⁾ 경제 침체의 원인이 서방세계의 '군사적 고사작전'에 의한 군사비 부담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 지도부의 이러한 상황 인식은 그들 체제의 생존 전략이든, 아니면 잘못된 상황 판단의 소산이든 간에 변화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사회통제방식 및 경제관리 원칙과 기존 노선에 의거한 '우리식 사회주의' 내지 강성대국론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경제난의 위기가 사회주의권의 변혁이나 자연재해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 체제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며, 그들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평가에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이러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경제위기에 빠졌으며, 경제위기의 극복을 둘러싸고 엘리트간에 노선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노선 갈등은 지도체제가 통합되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하여 밑으로부터의 체제도전에 의해 스스로 붕괴되었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던 특성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된' 정치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대적인 권력자의 장기지배에 따른 권력엘리트의 응집력, 나름대로 공식이념의 기능작용, 통제경제의 골격유지, 외면적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의 부재와 비교적 효율적인 사회통제, 그리고 외부정보의 낮은 유입 등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에도 이러한 체제존속에 효과적인 요인들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한국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2)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중앙년감』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95), pp. 49~63, 또한 북한은 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 논설을 통해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 논설은 "새삼스럽게 더 개혁할 것도 없고 개발할 것도 없다"면서, "제국주의자들이 몰려오는 개혁·개방 바람을 물리치는 위력한 방도는 경제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 1998년 8월 17일.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나 증언 내용에 의하면, 그들의 북한 사회주의체제 인식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점차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식의 내용은 인민들의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통제의 이완과 그들의 불만고조, 북한 장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탈행위, 중국으로의 탈북자 문제, 그리고 식량을 구하기 위한 여행 묵인, 국제적인 경제협력 관계의 미약,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등이다. 북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난의 행군'으로 포장한 내핍생활의 강요는 결국 정권의 정통성을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정치사회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매우 특수한 집단이지만,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북한 사회주의체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분석·검토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들의 체제 인식 성향을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체제(Regime)³⁾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될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주로 중국의 연변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북한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조사할 내용은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의 이유와 체제 존속기간의 인식이며, 둘째 내용은 체제 비판세력의 존재 여부와 체제비판 행위 가능성이며, 셋째 내용은 사회불만 표출과 사회통제의 효율성 진단이며, 넷째 당·국가의 지시·노선의 하부조직까지의 관철여부와 당·국가 간부의 긍지감 및 지도자 평가이고, 다섯째 비공식적 경제생활과 노동의 대가 평가 문제이고, 여섯째 남북한 체제 비교와 한국

3) 이스튼에 의하면 변화는 권력엘리트(Power Elite), 체제(Regime), 체계 혹은 국가(System or State) 등의 세가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David Easton, "Systems Analysis and Its Classical Critics", *Political Science Reviewer*, Vol. 3(1973), pp. 269~301.

사회 인식, 일곱째 북한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이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기존 인터뷰 조사보고서, 탈북자 수기, 그리고 재외한인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사연구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사인터뷰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 문항은 체제의 존속 이유와 비판 가능성(4문항), 사회통제 효율성(4문항), 경제생활(2문항), 남북한 체제 비교 및 미래에 대한 희망(3문항) 등 13개이다. 조사 지역은 연길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왕청현, 화룡현, 안도현 등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 지역에서 표집된 면담 인원은 200명이다. 조사기간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수집된 자료는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통계상당실에서 SAS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계치는 변인구성 백분비(%), 자유도(df)와 집단간 차의 유의도 검증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할 통계치는 지면 사용의 제한 때문에 빈도수와 변인구성 백분비 등이다.

중국에서 탈북자들과의 면담은 중국공안, 조교(조선족교포) 및 북한 특무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제한점은 200명의 표집·면담인원이 과연 10만~30만의 재중 탈북자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남녀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사회경제적 지위별, 그리고 당원·비당원별로 면밀하게 면담계획을 세웠다.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은 한국인 교수 2명과 조교 2명, 중국에서 조선족교수 2명, 조교 2명 등 훈련된 면담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표 1〉 배경변인별 표집 인원

변 인	변 인 구 분	변 인 구 성 비(%)
성 별	남	122(61.0)
	여	78(39.0)
연 령	10대	15(7.5)
	20대	43(21.5)
	30대	82(41.0)
	40대	33(16.5)
	50대	13(6.5)
	60대	14(7.0)
월 평 균 수 입	0~19원	99(49.5)
	20~39원	7(3.5)
	40~59원	27(13.5)
	60~79원	39(19.5)
	80원 이상	28(14.0)
직 업	당, 국가공무원	12(6.0)
	노동자	104(52.0)
	농장원	33(16.5)
	군인, 안전원	11(5.5)
	기자, 방송원	2(1.0)
	교원, 연구원	3(1.5)
	학생	15(7.5)
	상인	3(1.5)
	기술자	1(0.5)
	의사, 약사, 간호사	3(1.5)
	복무원	3(1.5)
기타	10(5.0)	
교 육 정 도	인민학교	0(.0)
	중학교	104(52.0)
	고중	50(25.0)
	전문학교	9(4.5)
	대학이상	12(6.0)
	기타	2(1.0)
당 원 여 부	당원	34(17.0)
	후보당원	4(2.0)
	비당원	162(81.0)

II. 북한체제의 유지 이유와 체제 비판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관료주의 통제원리의 경직성과 관료주의적 병폐로 인하여 경제가 쇠퇴하여졌다. 식량난으로 인한 경제난은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소련·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함으로써 전통적 사회주의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북한은 부분적인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김대중·김정일의 정상회담,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강택민(江澤民)의 북한 방문 등 외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외교적 노력을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라는 교조적 정치지도이념을 변화시키지 않은 이러한 부분적인 개방은 단기적으로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방·개혁은 불가피한 것이다.

1.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

동·서독의 통일이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의 경제 위기는 전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북한이 붕괴하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서로 상이한 견해를 보여 왔다.

기존의 학계에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당분간 북한은 정책 수준의 변화만을 시도하여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기존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동구처럼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체제 자체가 붕괴된다는 입장이고, 세번째는 북한에서도 정권 내지 체제수준의 변화를 통해 경제를 비롯한 당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점이다⁴⁾.

4) Wan-Kyu Choi, "The Current State and Tasks of Study of Change in the

이 조사연구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인식을 밝히려고 한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당신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몇 년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45.5%의 탈북자는 5년 이하로 생각하였다. 33%의 사람들은 5~10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5%의 사람들만 30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10년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반응 비율은 남성(5년 이내 44.3%, 5~10년 36.9%)이 여성(5년 이내 47.4%, 5~10년 26.9%)보다 높고, 교육정도별 탈북자의 인식성향은 대학(82.7%), 고중(80%), 전문학교(55.5%), 그리고 중학교(38.7%)순이다. 또한 당원과 비당원간의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기간의 반응 비율은 당원(82%)이 비당원(76%)보다 더 높다.

1999년 한국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럭저럭 생존할 것이다"와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46.8%와 9.3%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한 국민들이 북한의 향후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⁵⁾. 남·북한 주민들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기간에 대해 상반되는 인식을 하고 있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78.5%의 재중 탈북자들은 10년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약 50%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어 나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⁶⁾.

이러한 상이한 인식은 어느 쪽이 더 실질과 부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쌍방은 모두 제한된 정보 하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초기부터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 A South Korean Perspective", *Understanding Dynamics in North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8), pp. 25~63

5) 최수영·박영호·홍관희·허문영외,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18~19

6) 위의 책.

고 있지만, 북한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체제유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탈북자들의 인식은 그들이 북한 내에서 직접 경제적 위기 상황을 경험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의 아사자와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한 공장·어선 등의 생산중단, 70년대 토지의 과도 개발과 현재 비료의 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의 지속적인 침체,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에 대한 불만 등 사회경제 문제는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탈출한 후 개혁·개방된 활발한 중국의 시장, 그리고 연변에 은신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과의 접촉, 위성 TV 및 연변 조선족으로부터 알게 된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산다'는 사실은 탈북자들로 하여금 북한체제에 대한 실망감을 더욱더 가중시켰을 것이다.

〈표 2〉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기간 인식

N	반 응 구 분 (%)				
	5년 이하	5~10년	10~30년	30년 이상	기 타
200	91(45.5)	66(33.0)	18(9.0)	5(2.5)	20(10.0)
변인별 선택적으로 표 작성					

현재 북한의 상황은 정권 수립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당분간 김정일 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탈북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표 3〉에서 보면, 65%의 탈북자는 북한 체제유지 이유를 사회통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반응 비율은 민족개념의 정당화였다. 이는 전체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몇 십년간의 주체사상이 유일적 통치이념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 이유를 '공식이념의 기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5%으로 가장 낮은 반응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유지 이유

N	반 응 구 분(%)					
	공식이념의 기능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엘리트의 응집력	사회통제	외부정보의 유입 차단	기타
200	7(3.5)	23(11.5)	3(1.5)	130(65.0)	20(10.00)	17(8.5)

탈북자들은 북한의 경제위기와 이에 파생된 사회문제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유지기간을 단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의 사회통제를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배급 등 공식적인 경제활동이 마비된 상황하에서도 북한의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소련이나 동구 내지 지금의 중국은 모두 당·국가 체제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당-인민대중의 전일적(全一的) 체제이며, 정치·사회적 생명체론을 바탕으로 한 수령중심의 체제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권력승계를 마치고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등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혈통을 토대로 한 권력의 세습적 승계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다르다. 소련의 경우 80년대 초반에 세 명의 연로한 소련 지도자들이 연달아 사망함으로써 흐루시초프 정권하에서 자란 소위 젊은 엘리트들이 등장하여 고르바초프 개혁의 조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 중국의 경우를 보면, 모택동 사망 후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자들이 급진적인 좌파를 제거하고 과거 모택동 시대의 '계급투쟁 중심'을 부정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부자세습'이기 때문에 과거 소련이나 중국과 같이 본질적으로 기본노선을 부정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 정권에서 근본적인 개혁은 어려울 것이다.

탈북자와의 인터뷰에서 보면, 거의 100%의 탈북자들은 북한이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군사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북한을 과대 평가해서 긍지감을 갖게 만들었다. 또한 몇 십년간의 주체사상의 교육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수령에 대한 충성을 최대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모든 문제에 대한

사고를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게 하는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인 사고 방식을 많이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은 저항 의식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사회통제도 비교적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실재를 보면 자본주의 경제를 기초로 하는 시민사회의 경험이나 서구형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반체제적 대중운동의 경험, 그러한 대중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인물, 더욱이 공산주의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항문화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⁷⁾,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엄밀한 상호간의 감시·적발, 그리고 가혹한 처벌은 북한 주민들에게 극단적인 공포감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공포감의 조성은 사회적 통제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 체제 비판의 행위 및 세력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이 전체주의적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적 이탈자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정치·사회적 불만세력들을 양산할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던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비판행위 가능성과 비공식적인 체제 비판세력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을 인터뷰하였다. “당신은 구체적인 체제비판 행위, 예를 들어 김일성 및 김정일 비판의 뼈라 또는 낙서 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 비율을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탈북자는 25.5%이고,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반응한 탈북자는 22%를 차지함으로써, 체제비판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 비율은 47.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대체로 있었음 22.1%, 분명히 있었음 24.6%)이 체제 비판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반응 비율이 여성의 반응 비율(대체로 있었음 30.8%, 분명히 있었음 17.9%)보다 낮다. 연령별 체제 비판행위의 존재유무에 대한 반응은

7) 시카이 다카시, “북한의 정치개혁 기사화되고 있다”, 『사회와 사상』, 제21호 (1990), p. 57

40대(60.6%), 20대(46.5%), 30대(45.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체제비판 행위 유무에 대한 재증 탈북자의 인식 성향은 당원(58%)이 비당원(43%)보다 더 높다.

〈표 4〉 구체적인 체제 비판행위

N	반 응 구 분(%)				
	상상할 수 없었음	대체로 없을 것으로 생각했음	대체로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	분명히 있었음	기 타
200	59(29.5)	39(19.5)	51(25.5)	44(22.0)	7(3.5)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비공개적인 체제비판 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대체로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에 응답한 탈북자는 26.5%이고, '분명히 있었음'에 응답한 사람은 17.5%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이 있었다고 반응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44%이다. 이 반응 결과는 북한에서 주민에 대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체제 비판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비공개적인' 체제비판 세력의 존재

N	반 응 구 분(%)				
	상상할 수 없었음	대체로 없을 것으로 생각했음	대체로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	분명히 있었음	기 타
200	68(34.0)	36(18.0)	53(26.5)	35(17.5)	8(4.0)

〈표 4〉와 〈표 5〉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주체사상을 내세우면서 전체주의적 통치를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비판'과 '체제비판 세력'이 존재했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약 절반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 수치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한 '북한 제2사회'8) 존재를 경험적으로 뒷받침

8)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주의구조와 사회주의 의식의 이중성 연구』(서울: 나남 199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중국 접경지역 현장조사

하고 있다.

모든 사회주의체제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적 병폐로 인하여 경제가 쇠퇴하였다면,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⁹⁾. 1995년 이후부터 계속돼 온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주민에 대한 통제를 이완하고 장마당에서 매매활동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자유여행은 북한 주민들 서로간의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러한 정보유통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확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¹⁰⁾.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정치적으로는 다원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화 및 사유화를 지향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구체적 변화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¹¹⁾. 소련의 경우 스탈린부터 시작해 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안드로포프·체르넨코·고르바초프 등 대를 걸친 파벌투쟁 과정에서 젊은 전문지식과 개혁성향을 가진 엘리트들이 개혁의 주도세력을 형성하였다. 중국의 경우 1950년대 말기의 노산회의(廬山會議)부터 시작한 중국공산당 내부의 노선투쟁은 1970년대 말까지 거의 20년을 이어왔다.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원회의 이후 등소평이 집권한 후 '지식화', '연경화'의 간부 노선은 전문화 수준의 높은 젊은 관료들을 중국 정치무대에 등장시켰다. 이들은 점차적으로 위로부터(自上而下)의 개혁·개방 노선을 이끌고 나갔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중국처럼 위로부터(自上而下)의 개혁을 실시하기

를 통해 본 탈북난민과 북한사회 실상』, p. 48, 『또 하나의 북한사회』라는 저서에서 서재진은 북한에서 '제 2사회' 형성 가능성을 제기시켰다. '제2사회'란 북한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공식적 사회의 바깥에서 살고,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추구하는 지하사회이다.

9) 이교덕,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

10) 위의 책, p. 48.

11) 편차를 가져온 요인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생적 혁명전통과 개혁전통, 지배 엘리트의 특성, 경제발전 정도와 서방세계화와의 관계, 사회적 다원화,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등이다. 서진영, 『북한권력변동 및 사회변화 대미 계획연구: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의 검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도 어렵다.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 근거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와 '유 혼 통치' 에 있다. 북한의 근본적인 개혁의 의미는 주체사상의 포기이며, 이에 바탕을 둔 김정일 정권 정당성의 근거상실인 것이다. 김정일은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원인이 경제적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상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패라고 인식한다. 때문에 단기간 김정일 정권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스스로 체제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다른 한편 북한의 효율적인 정치·사회적 통제하에서 반체제적 세력은 형성되기 힘들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의 정치·사상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생존조차 유지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은 위기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자연적 재해 때문이 아니라 체제모순 때문이라고 점차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 모순의 표현이 재중 탈북자인 것이다.

중국 동북아연구중심 연구원이며 중국에서 유명한 남북한 통일문제 전문가인 진용산(陳龍山)씨에 의하면 “조선인민이 불법으로 대량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와 조선, 그리고 남조선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크다. 조선의 경제·식량·에너지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며, 곤경을 탈출한 희망도 없고, 백성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에 대한 불만과 원한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조선의 반정부조직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서 고도의 관심이 요망된다. …… 우리는 조선의 불법월경자 중에서 ‘반김정일체제 분자’라고 자칭하는 자도 있고, 중국에 온 목적이 연변지역에 ‘혁명기지’ 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자도 있으며, 국내의 ‘동지’ 를 위해 활동경비를 마련하고 아울러 연변지역의 한국인, 미국인과 몰래 접촉, 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는 자도 발견했다”¹²⁾. 이 내용을 확신하기 어렵지만, 재중 탈북자들 중에 정치적 비판세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북간에는 지리적·정치적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체제 세력에 대한 연구를

12) 陳龍山, “조선의 불법월경 가이자 및 조선사회 현상에 대한보고”, 『북한·중국 접경지역 현장조사를 통해 본 탈북난민과 북한사회 실상』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9)

재중 탈북자의 연구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Ⅲ. 사회통제

전형적인 전체주의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그 속성상 정치적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한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한다고 명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은 유일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성분 및 사상통제는 물론, 방대한 정치적·사회적 조직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감시·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통제는 오늘날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표 3〉 참조: 65%의 탈북자는 북한의 체제유지 이유를 사회적 통제라고 인식하였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사회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의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상태에 있었지만, 북한에서 군중봉기 같은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북자들이 사회적 불만과 사회통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은 극도의 위기 속에서 북한주민들이 사회불만 표출, 사회통제의 효율성, 지도자 인식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1. 사회불만

북한 당국은 출신성분 구분, 사상학습 교양, 언론 통제, 정치조직(당적 통제조직·국가안전보위부), 사회조직(인민반 조직·5호담당제)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반체제의 모든 행위에 대해 억제·탄압하고 있지만, 식량을 구하기 위한 사회적 이동은 이러한 통제를 불가피하게 이완시켰다.

〈표 6〉에서 보면 “해당분야의 간부들에게 식량배급, 여행, 노동조건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을 어느 정도 표출하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서 ‘약간 표출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응답한 탈북자는 23%이고, ‘충분히 표출할 수 있었음’을 선택한 탈북자는 22%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당·국가

간부에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탈북자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살펴보면 남성일수록 불만을 노출할 수 있다는 반응 비율이 높다(남성 46.7%, 여성 42.3%). 연령별 반응 성향은 30대(46.3%), 20대(41.4%), 40대(39.4%)순으로 나타났다. 당원·비당원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만표출의 반응은 당원(58.9%)이 비당원(41.4%)보다 높다.

〈표 6〉 사회불만의 표출

N	반 응 구 분(%)				
	표출할 수 없다	별로 표출할 수 없었음	약간 표출할 수 있었음	충분히 표출할 수 있었음	기 타
200	77(38.5)	27(13.5)	46(23)	44(22.0)	4(3.0)

일부 주민들 사이에 “식량문제는 수재 문제이긴 하지만 인재 때문이기도 하다” 라고 비밀스럽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1997·1998년의 탈북자와의 면담을 보면, 극소수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만 북한의 경제의 원인을 체제모순에서 찾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 재해, 미국과 한국의 봉쇄정책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2000년의 면담을 보면 극소수의 60대의 노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체제 모순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의 식량과 생활 필수품의 공식 배급체제의 와해로 인하여 주민의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동원·인민학습의 효율성이 약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마당과 소규모의 개인 장사의 활성화, 그리고 비공식 변경무역과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돈장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¹³⁾, 식량난으로 인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탈북한 후 체제의 비교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체제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탈북자 중에 오래 전부터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엄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탈북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김정일 비판을 노골적으로 하였다.

한편 북한의 은어와 풍자어를 통한 당·정·군 간부의 행태에 관한 연

13) 『중앙일보』, 1997년 7월 2일

구를 보더라도 일반주민들의 국가 권력기관의 반인민적 행태에 대한 심리적 저항의식과 적대감은 총체적으로 인민들 사이에 넓게 퍼져있다. 이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부패하였으며 김정일 정권이 억압기제 일변도의 통치로 인한 일반주민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⁴⁾.

2. 사회통제의 효율성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인민들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비밀리에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극심한 경제난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북한 당국의 교양처럼 자연재해나 국제적인 경제 봉쇄라고 믿지 않고 체제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

(사)좋은 벗들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생활에 전반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의 질문에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5.2%이고, 만족(0.5%), 보통(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주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2.2%를 차지하고 있어서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사회 생활에 극히 불만족하고 있다.¹⁵⁾ 뿐만 아니라 탈북자가 증가하고 북한 내에서 과거 지역간의 엄격한 봉쇄도 이완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로 간의 정보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제는 여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7>에서 보면 “인민보안청 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의 주민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면, 25.5%의 탈북자는 사회통제가 ‘매우 잘 유지되었음’에 응답하였고, 37%의 사람들이 대체로 유지되었음에 응답하였다. 결국 사회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한 탈북자의 비율은 62.5%를 차지하였다. ‘대체로 유지 안 되었음’에 응답

14) 최봉대·오유석, “은어·풍자어를 통해 본 북한체제의 탈정당화 문제”, 『한국사회학』, 제32집 (서울: 한국사회, 1998), pp. 645~678. 그러나 당·정·군간부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은 결코 당적으로 행해서는 안되고, 한 자연인으로서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당적 비판은 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정치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중국접경지역 현장조사를 통해 본 탈북난민과 북한사회 실상』, 위의 책, p. 61

15) (사)좋은 벗들, 『북한 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서울: 정토출판, 2001), p. 65.

한 자는 21%이며 ‘거의 유지 안되었음’에 응답한자는 13.5%이다. 사회 통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탈북자는 34.5%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은 북한의 사회통제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7〉 사회 통제

N	반응구분(%)				
	매우 잘 유지되었음	대체로 유지되었음	대체로 유지 안되었음	거의 유지 안되었음	기타
200	51(25.5)	74(37.0)	42(21.0)	27(13.5)	6(3.0)

3. 지시·노선의 관철

북한은 혁명과 건설의 주체가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라고 명시하고, 이러한 전일적 통일체의 이론적 기초로 ‘사회정치적 생명체’ 개념을 설정하여 수령의 역할을 절대시하는 유일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국제·국내적 위기상황에 빠진 북한 정권이 인민들에게 내린 지시·노선은 과연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라는 문제를 주제로 다음과 같은 문항을 설정하였다. “당신의 직장에서 김일성, 김정일, 당의 지시나 노선이 최하위 실무단체 조직(협동농장, 동장, 기업소, 중대, 소대, 등의 각 기관)까지 어느 정도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매우 잘 전달되었음’에 응답한 탈북자는 52%를 차지하였고, ‘대체로 전달되었음’에 응답한 탈북자는 27.5%이다. 전체적으로 지시·명령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응답하는 탈북자는 79.5%를 차지한다. 성별 조사결과를 보면, 여성(88.4%)이 남성(73.8%)보다 김정일 및 조선노동당의 지시·노선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령별 반응 성향은 40(84.8%), 20대(81.4%), 30대(74.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중학교(88.5%), 고중(70%), 대학(50%)의 순으로 김정일 및 조선노동당의 지시·노선이 잘 관철되고 있다고 반응하였다.

〈표 8〉 조선로동당의 지시·노선의 관철

N	반 응 구 분(%)				
	매우 잘 전달 되었음	대체로 잘 전달되지 않았음	대체로 전달되지 않았음	거 의 전달되지 않았음	기 타
200	104(52.0)	55(27.5)	26(13.0)	11(5.5)	4(2.0)

4. 지도자 인식

다음 문항은 북한 사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 탈북자는 94.5%를 차지하였다. 특히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함'에 응답한 자는 85.5%이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탈북자의 비율은 1%뿐이다. 탈북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38.4%이고,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33%이다. 한국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반대하기보다 지지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¹⁶⁾.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김정일 위원장의 지지도가 극단적으로 낮다. 94.5%라는 수치의 의미는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리더십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변인 구분에서 직업별로 보면, 상인·기술자·의사·약사·간호사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반응한 비율은 100%이고, 학생과 복무원 출신의 탈북자 1%만이 김정일의 자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타 다른 직업의 탈북자는 100%가 매우 부정적으로 그를 인식하였다. 교육정도에서 보면, 고중·전문학교·대학 이상의 학력 탈북자는 100%가 부정적으로 그를 인식하고 있다.

16) 최수영·박영호·홍관희·허문영, 앞의 책, p. 14.

〈표 9〉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질

N	반 응 구 분(%)				
	매우 긍정적 으로 생각함	대체로 긍정적 으로 생각함	대체로 부정적 으로 생각함	매우 부정적 으로 생각함	기 타
200	2(1.0)	6(3.0)	18(9.0)	171(85.5)	3(1.5)

IV. 경제생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 보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장마당 경제의 활성화이다. 북한에서는 암거래와 밀무역, 그리고 당·군 등의 권력기구 및 관련계층이 특권을 이용한 불법적인 이익 추구 등 다양한 비공식적 경제의 존재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식량난 이후 공식적·비공식적 경제활동과 노동,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1. 공식적·비공식적 경제활동

사회주의체제의 경제 생활에서 근본적인 특징은 국가의 계획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앙계획경제, 고정임금체제, 그리고 가격통제는 그들 체제의 일반적 특징이다. 그러나 계획경제가 유일한 경제유형은 아니다. 계획경제와 함께 '제2경제' 라고 불리는 비공식경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2경제는 일반적인 경제인 소비재 부족과 관료적인 병목현상을 완화시키고 계획경제체제가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또한 이것은 정치적인 불안을 소비자주의 및 소규모 부패로 유도하면서 사회통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¹⁷⁾.

북한은 식량난 이후 사회주의 경제 연구에서 오래 전부터 제2경제란 용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제2경제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도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사경제가 존재하는데 착안하여 경제

17)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1.

의 사적 자율화 영역 확대가 경제뿐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에 ‘제2경제’라 표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¹⁸⁾.

북한의 비공식경제의 대상은 주로 농축산물과 생필품이다. 그 유통은 장마당(농민시장), 암시장, 직매점, 수매재생상점 등이다. 1990년대 초부터 공식배급기능이 약화되자 이러한 비공식적 부분의 역할이 크게 증가되었다.

(사)좋은 벗들이 2000년 1월 18일부터 3월 13일 사이 2차에 걸쳐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요녕성 심양시에 은거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의하면, ‘장마당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100%이고,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92.5%이다. 또한 “식량난이 해결된 후에도 장마당이 존속되기를 원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100%의 탈북자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대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9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9%이며,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9.5%였다¹⁹⁾. 이상의 수치는 우리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북한의 주민들은 거의 100%가 장마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식량 등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장마당에 뛰어들다.

이번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표 10〉), (사)좋은 벗들이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당신은 경제생활에서 공식부문(월급 및 배급)과 비공식 부문(부수입, 장사, 텃밭 소득 포함) 소득 중 어떤 부분이 더 컸습니까?”라는 문항에서 보면, 62.5%의 탈북자는 ‘비공식 부문이 훨씬 더 컸음’에 응답하였고, 17%의 탈북자는 비공식 부문이 약간 더 컸음에 응답하였다. 이로써 비공식적 부분의 소득이 더 컸다고 인정한 비율은 79.5%이다. 이 연구 결과는 (사)좋은 벗들의 연구 결과와 같다. 북한에서 현재 비공식 부문의 경제 활동이 공식부문의 경제활동 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

18)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1997년 2월호, p. 52.

19) (사)좋은 벗들, 『북한사회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가』 (서울: 정토출판, 2001), pp. 22~23, pp. 42~43.

〈표 10〉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경제생활

N	반 응 구 분(%)				
	공식부문이 훨씬 더 컸음	공식부문이 약간 더 컸음	비공식 부문이 약간 더 컸음	비공식 부문이 훨씬 더 컸음	기 타
200	17(8.5)	19(9.5)	34(17.0)	125(62.5)	5(2.5)

2. 노동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의 직업 선택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부문별 노동력 배치에 의해 구성된다. 직장 배치를 할 때에는 간부사업(공무원)의 대상자와 노동자를 구분한다. 간부사업의 대상자는 도·시·군당 간부에서 관장하며 노동자는 해당지역 시·군 인민위원회가 배치한다. 배치받은 주민들에게 국가는 노임을 준다. 북한 당국은 노동을 상품으로 여기는 의미를 없애고 국가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도와 준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생활비'로 고쳐부를 것을 결정했다.²⁰⁾ 그러나 현실 삶에서 '노임'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직종과 소속 산업부문, 노동분류에 따라 정액임금제와 도급임금제로 구분된다. 북한주민이 받은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대체로 기술자의 노임이 사무원보다 높으며, 유해노동의 종사자, 중노동자들의 노임이 높다.

20)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1), pp. 235~237.

〈표 11〉 북한의 계층별 임금수준²¹⁾

구 분	직 위	임 금
당·정기관	당·정무원부장	300~350
	정무원부부장, 도인민위원장	250~300
	도인민위원회부위원장, 군인민위원회위원장	170~200
동장/기업소	특급기업소 지배인	250~300
	1~2급 기업소 지배인	150~200
노동자/사무원	광부, 제철, 제련공 등 노동자	90~100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등 경노동자	75~ 80
	일반경노동자	70~ 80
	사무원	60~ 70
교 원	대학교원	200~250
	일반교원	80
군 장교	장성급	250~400
	영관급	120~215
	위관급	84~110
서비스종사자	여관, 이발소, 식당 등 편의시설	20~ 60
	종사자	120~250
	의 사	200~500
	인민배우, 공훈배우	

북한의 1949년 내각결정 제 196호에 의해 임금기준을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규정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김일성-김정일 생일 때 동상을 찾아가 바치는 꽃송이 값, 잔칫집이나 결혼식 부조 등을 일관적으로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규정노임 보다 훨씬 적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직장에 내기도 한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가속화되자 1~2개월에서 5~6개월, 심지어 1년 이상 노임을 받지 못할 때도 많다. 북한주민들은 경제난 이후 거의 노임을 받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 위의 책, p. 238

〈표 12〉의 수치는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당신은 직장에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물질적 또는 도덕적으로 받았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거의 대가를 받지 못함’에 응답한 탈북자의 비율은 63%이고, ‘대체로 대가를 받지 못한 편임’에 응답한 탈북자는 21.5%이다. 결국 84.5%의 탈북자는 직장에서 노동 대가를 제대로, 심지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12〉 북한 주민들의 노동 대가 상황

N	반응구분(%)				
	거의 대가를 받음	대체로 대가를 받은 편임	대체로 대가를 받지 못한 편임	거의 대가를 받지 못함	기타
200	9(4.5)	20(10.0)	43(21.5)	126(63.0)	2(1.0)

3. 미래에 대한 희망

이 연구에서는 “당신은 당에서 주어진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일하면 보다 나은 미래를 가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경제난 심화의 시간적 지속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체제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예측과 부합하고 있다. ‘전혀 희망을 가지지 못함’에 응답한 탈북자는 58.5%이고, ‘대체로 희망을 가지지 못함’에 응답한 자는 28%이다. 이로써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희망을 가지지 못함에 응답한 자는 86.5%이다.

인터뷰를 통해 보면, 일부 탈북자들은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한국의 북한에 대한 봉쇄라고 인식하고 있고, 또 일부분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중간관료들의 부패에서 경제난의 원인을 찾고 있지만, 대부분 탈북자는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체제 및 김정일의 독재 체제가 경제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 개혁이 없이 ‘고난의 행군’ 같은 근면·자력갱생 같은 운동을 통해 근본적으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 (사)좋은

벗들이 “북한이 자력으로 갱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설문에서 ‘할 수 없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76.9%나 되었다.²²⁾

〈표 13〉 미래에 대한 희망

N	반 응 구 분(%)				
	확실히 희망을 가짐	대체로 희망을 가짐	대체로 희망을 가지지 못함	전혀 희망을 가지지 못함	기 타
200	7(3.5)	17(8.5)	56(28.0)	117(58.5)	3(1.5)

V. 남북한 비교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국가 발전전략의 이념으로 삼아 왔다.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남북 분단이라는 체제경쟁 속에서 북한은 반자본주의의 의식을 심화시켰다.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중국에서 시장경제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전통사회주의는 국제적으로 붕괴되었다.

북한의 내부에서는 동일한 시기에 식량난으로 인하여 일어난 경제위기가 체제에 심각한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국내적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이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1. 남북한체제 비교

장기간 폐쇄적인 체제와 어린 시절부터 받은 사회주의 우월성 교육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이며, 북한이 없으면 세계가 무너진다고 인식하게 해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속에서 식량을 자율적으로 구하기 시작하였고 지역간의 정보 교류 및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조선족 장사꾼, 북한 해외유학생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신뢰가 변화하게 된다. 탈북자의 경우 더욱 더 그렇다.

22) (사)좋은 벗들, 『북한 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서울: 정토출판, 2001), p. 60.

중국에서 직접 경험한 '풍요' 한 중국인의 생활, 많은 한국인들과의 접촉, 중국 조선족들이 소개로 알게된 한국의 부유한 생활 등은 이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와 한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되었다.

아래와 같은 설문에서 탈북자들의 응답 비율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 <표 14>에서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와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체제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체제인가” 라는 문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함’에 응답한 탈북자는 61%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약간 더 좋다고 생각함’에 응답한 탈북자는 26.5%이다.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다고 인식한 탈북자는 87.5%이다. 반응 구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에서 어느 정도 특권이 있고 노임이나 식량배급에서 혜택을 받던 군인, 안전원, 기자, 방송원, 교원, 연구원, 당 및 국가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탈북자들이 북한식 사회주의가 더 좋다고 선택한 비율은 0%이라는 점이다. 교육정도를 보면 전문학교·대학이상의 탈북자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선택한 비율이 0%이다. 학력 수준이 높은 탈북자일수록 한국식 자본주의를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의 상황과 같다.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지식인층으로부터 시작하며, 직접 당의 정책을 홍보·집행하던 관료들이 체제에 대해 더욱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또한 북한 장마당·암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선택한 비율이 0%이다. 그 원인을 보면, 계획경제체제 자체가 시장을 배척하기 때문에 장마당의 존재를 일시적으로 묵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상인들의 경영 활동을 제약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상업거래에서 북한의 특권 계층, 예를 들면 안전부, 보위부 등 사회통제 기관 관료들의 단속을 받기 된다. (사)좋은 벗들의 조사 수치는 이에 대해 뒤받침을 해 주고 있다. “북한에서 장사를 할 때 단속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2%이고, 29.2%의 사람들이 욕설 혹은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으며, 21.7%의 사람들은 물건을 빼앗겼다고 한다.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19%이다. 다시 말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6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장마당에서 이

루어지는 안전원의 단속이 일반 주민에 대한 착취와 횡포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²³⁾. 지나치고 무리한 통제는 상인들의 경영에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계획경제 체제의 폐쇄 상황은 상인들이 그 어느 계층보다 더 뼈저리게 느낀다. 때문에 이들이 누구보다도 계획경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표 14〉 북한식 사회주의와 남한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N	반 응 구 분(%)				
	조선 식 사회주의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함	조선 식 사회주의 약간 좋다고 생각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약간 더 좋다고 생각함	자유민주주의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함	기타
200	7(3.5)	13(6.5)	53(26.5)	122(61.0)	5(2.5)

2. 한국사회 인식

북한당국은 남·북한 분단 상황과 체제경쟁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념 갈등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철통식 폐쇄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북·중 변경무역을 비롯한 북·중 교류 및 북한에서 라진·선봉지역 등에 대한 조심스러운 개방 등으로 인해, 북한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못했다.

이 연구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 정도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정하였다. “당신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 경제발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라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체로 알고 있었음’에 응답한 탈북자는 48%이고, ‘매우 잘 알고 있었음’에 응답한 탈북자는 12.5%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60.5%이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71.3%)이 여성(52.6%)보다 높고, 당원·비당원별로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 지식은 당원(67.7%)이 비당원(58.1%)보다 더 높다.

23) (사)좋은 벗들, 위의 책, pp. 46~47

북한 당국은 사상적·정치적·사회적 통치를 통해 ‘철통식’ 봉쇄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철저히 봉쇄할 수는 없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는 탈북한 후 중국에서 얻은 것이 많지만 북한에서 생활할 때부터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람도 많다. 특히 장마당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관료들은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표15〉 한국민주화·경제발전 지식정도

N	반 응 구 분(%)				
	거의 모르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기 타
200	42(21.0)	30(15.0)	96(48.0)	25(12.5)	7(3.5)

VI. 결 론

북한은 사회주의를 체제이념으로 하여 사회 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남·북한 분단은 쌍방의 체제 경쟁을 심화시켰다. 이로써 북한은 반자본주의 의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단 노정과 경제난의 심화에 따라 북한 주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내 탈북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첫째 내용은 북한사회의 체제 존속과 체제내 비판세력의 유무이다. 이들은 5년 이하(45.5%) 또는 5~10년(33%) 정도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통제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제내 비판세력의 유무에 대하여 약 절반의 탈북자가 북한의 ‘제2사회’ 존재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의 경우와 달리 정치·사회적 통제가 극심한 북한에서 재중 탈북자들은 ‘조직적인’ 반체제적인 세력이 형성되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둘째 내용은 사회통제에서 사회불만과 통제의 효율성, 당 정책의 관

철, 지도자 인식 등이다. 북한에서 사회적 불만은 표출할 수 없으나 식량 문제로 인해 사회적 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이런 불만을 보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통제는 인민보안청,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당 정책 역시 일반적으로 최하위 실무조직까지 잘 관철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도자의 인식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하여 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탈북자가 94.5%를 차지해 한국사회와 다른 인식행태를 보여주었다. 셋째, 경제생활에 있어서 경제난과 격심한 식량부족은 북한의 비공식적 경제생활(장마당, 부수입, 텃밭 소득 등)영역을 확대시켰다. 또한 탈북자의 84.5%가 노동대가를 제대로, 심지어 전혀 못받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86.5%). 넷째, 남북한 체제비교에서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잘 알고 있었으며, 북한식 사회주의보다는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더 선호하고 있다(87.5%).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 인식, 사회에 대한 만족도, 남북한 제도에 대한 비교 등은 매우 부정적이다. 반체제적인 언론, 활동 및 반체제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회피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사회통제는 여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경제 생활에서 비공식부분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북한주민들은 대부분 '장사열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마당의 활성화는 어느 정도 식량난 극복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장마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침체, 투자 자원부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²⁴⁾.

북한사회는 10여 년의 경제위기를 겪어 왔으며 반체제 인식도 심각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중증봉기 같은 정권의 붕괴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국내적·국제적 압력하에서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외관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발전 모델에서도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의 언술에서 자본주의

24) 최완규외, 『북한·중국 접경지역 현장조사를 통해 본 탈북난민과 북한사회 실상』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9), p. 67.

인식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주의체제이고 개혁·개방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보수적이다.

북한 주민들이 체제불만을 이완시키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정권은 부분적인 개혁을 점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성장 정책과 논리적 모순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김정일 체제가 스스로 주체사상을 위협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도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 정권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본주의에 익숙해 질 것이다. 탈북자의 인터뷰에서 주지하듯이 북한 주민들이 극도의 경제난의 상황에서 현정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비공식적 경제 활동 및 중국·한국인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익숙해 질 것이고, 따라서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북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올바른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 사회주의구조와 사회주의 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 1995.
- 서진영. 『북한권력변동 및 사회변화 대매 계획연구: 예상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의 검토』. 서울: 통일원, 1990
- 시카이 다카시 “북한의 정치개혁 기사화되고 있다”, 『사회와 사상』. 제 21 호. 1990.
- 이교덕.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1996. 12.
-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1997. 2.
- 진용산. 『북한·중국 접경지역 현장조사를 통해 본 탈북난민과 북한사회 실상』.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9.
- (사)좋은 벗들. 『북한은 무엇이 변화고 있는가』. 서울: 정토출판. 2001.
-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최수영 외.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 최완규외. 『북한·중국 접경지역 현장조사를 통해 본 탈북난민과 북한사회 실상』.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99.
- 최봉대·오유석. “은어·풍자어를 통해 본 북한체제의 탈정당화 문제”, 『한국사회학』 제32집, 서울: 한국사회. 1998.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1.
- 『조선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
- 『중앙일보』. 『로동신문』.
- Aidam Foster-Carter. “Some Considerations on Opening and Reform in North Korea”. “북한의 대외 개방 전망과 경제적 파급효과,” 제5회 북한 경제 국제 학술회의.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
- Wan-Kyu Choi. “The Current State and Tasks of Study of Change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 A South

Korean Perspective,” *Understanding Dynamics in North Korea* .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8.